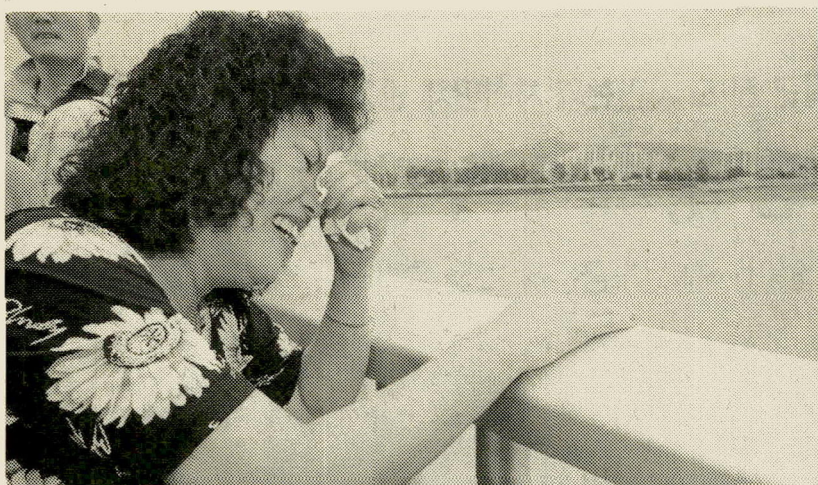


1977년

7.4. 수요일 새벽

한겨레



가족잃은 고통 계속
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년8개월만에 재개통된
3일 당시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 유족이 다리 난간
김진수 기자

“재산세 파동 언론 무책임 보도탓”

“일부 대형주택 소유주들의 세법에 대한 무지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때문에 아까운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된 것도 안타깝지만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것이 무엇보다 가슴아프습니다.”

최근 일산새도시 단독주택 재산세 과다부과 보도로 곤욕을 치른 이인재 일산구청장은 무책임한 언론보도가 가져온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산구가 재산세 과다부과 파동에 휩쓸린 것은 이달초 97년 정기본 재산세를 부과하면서부터다.

지난해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갔고 구청 소식지를 통해 “재산세는 ‘건물시가 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이뤄져 공무원의 자의적인 부과가 있을 수 없다”는 안내까지 한 터라 재산세 파동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한 중앙일간지가 일부 주민들의 주장만 듣고 일산의 단독주택 재산세가 서울에 비해 과다부과됐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구청은 난데없는 항의방문과 전화공세에 시달려

현장

야 했다. 일산구는 지난달 21일부터 주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보도가 터무니 없다는 내용의 전단 10만장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어 세무과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생고생을 하고 있다.

구는 이 자료에서 △일산의 단독주택은 1주택에 1가구만 사는 주거전용 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등의 부과내용을 밝혀 주민들의 오해를 풀었지만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됐다.

난데없는 재산세 과다부과 파동으로 지난 며칠 동안 시달린 세무과의 한 직원은 “일산에서 가장 넓은 평형(건평 77~99평)에 사는 1백27가구의 단독주택 소유주 가운데 일부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집단행동을 통해 재산세를 줄이려 하고, 일부 언론이 이에 편승하는 기사를 쓰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권기식 기자

정정보도문

본지 지난 5월22일자 25면 ‘매맞아 죽은 여자 위령제’ 제하의 상자기사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눈물을 비치더니 곧 행사장 이곳저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는 내용과 함께 한풀이춤 사진을 실었으나 사진 속 휠체어에 앉아 있던 여성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장애인인 아니라 ‘빛장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여성단체의 회원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